

법령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무총리는 2년마다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ㄴ. 기본지침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 ㄷ. 국무총리가 작성한 기본지침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모든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지만, 확인·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 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한 물자가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②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③ 특별자치도
 - ④ 군(郡) 교육지원청

-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군수는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ㄴ.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ㄷ.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ㄹ.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 포함)을 하게 할 수 있다.
- ㄴ.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를 지정하는 경우 물자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 ㄷ.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는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 대통령이 발령한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 ④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훈련은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훈련은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인용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치르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③ 훈련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④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상훈련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훈련실시대상 중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훈련이 면제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국외여행 중인 사람 ㄴ. 외국 항공기의 승무원 ㄷ.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에 참여한 사람 ㄹ.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ㅁ.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생 ㅂ.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직원 ㅅ.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ㅇ.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
|---|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ㅅ, ㅇ
- ③ ㄷ, ㄹ, ㅁ, ㅂ
- ④ ㅁ, ㅂ, ㅅ, ㅇ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책임하에 행정안전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로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정부연습은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습방법은 문서에 의한 도상연습과 시험제품 생산연습으로 구분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의 확인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확인·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비훈련과 다른 훈련 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훈련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②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 비상대비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동시관리훈련 -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 ④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에 포함된다.
-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재난구호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④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회사무총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ㄷ. 국가보훈처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데,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ㄹ.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시장)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데,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 25세의 여성인 甲은 대학의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 27세의 남성인 乙은 A시에 거주하며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7년째 재학 중인 학생이다.
- 33세의 남성인 丙은 A시 소재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 48세의 남성인 丁은 대기업을 명예퇴직하고 A시에 거주하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 ① 甲은 지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나,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당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권으로 甲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乙은 산업대학에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나면 A시의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하지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 ③ 丙이 퇴직함으로써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19명이 된 경우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A시 소재의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A시 인근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④ 丁은 지원하여 A시의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었으나, 이후 A시에서 B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甲은 A시 B동에 거주하는 33세의 남성으로 C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甲은 C 기업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으며, 그 민방위 대장은 乙이다. 이후 甲은 2021년 9월 30일자로 C 기업을 퇴직하고 직업 없이 2022년 11월 1일 현재 A시 B동에 거주하고 있다.

— <보 기> —

- ㄱ. 甲은 2021년 10월 7일까지 B동 동장에게 퇴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ㄴ. 乙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B동 동장에게 甲의 이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ㄷ. B동 동장은 甲의 이동 사항에 대한 乙의 신고가 있는 때에 甲에 대하여 즉시 지역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ㄹ. 乙은 甲을 삭제한 2022년도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2022년 1월 10일까지 A시의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ㄴ.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6개월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ㄷ. 6개월 간 국외파견 중인 검사의 교육훈련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 ㄹ. 민방위 대원 甲의 교육훈련일에 본인의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 소집일 3일 전에 甲의 모친이 甲을 대신하여 甲의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甲은 훈련을 유예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하는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취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의 피난을 위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 등으로 공고하여야 하는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도 B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C동의 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여 2018. 3. 11. 동원을 명하였고, C동에 주소를 둔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18. 3. 14. 부상을 당한 후 장애등급 제2급으로 판정되어 800일 동안 치료에 전념하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200만원이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300만원이며,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10만 원이다.

- ① 甲의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대해 B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나 A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甲이 치료신청서를 B시장에게 제출하여 B시에 소재한 의료시설을 지정받은 경우 치료 비용은 B시가 부담하고, 이 경우 국가는 B시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甲은 휴업 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甲은 부상으로 인한 재해 보상금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보상금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사망 보상금으로 1억 800만원을 지급받는다.

문 23. 야간에 적기(敵機)의 공습이 시작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조치를 명하려고 한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화관제는 항공기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사이렌·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경보하여야 한다.
- ③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의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의 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문 25. 「민방위기본법」상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甲
- ㄴ. A 직장 민방위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B 직장 민방위 대장 乙
- ㄷ.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丙
- ㄹ.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한 고용인 丁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 甲은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섬에 있는 예비군대원 乙에게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지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乙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② 甲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위해 전화의 방법으로 乙에게 소집통지를 한 경우, 소집통지를 받은 乙은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乙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경우, 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과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예비군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익법무관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에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 ③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 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후 10년이 지난 예비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 ④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때에는 예비군 대원인 예비역 준사관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문 28.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1년 동안 40명의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직장예비군을 분대로 편성하여 운영한 경우
 ㄴ. 2년 동안 80명의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직장예비군을 중대로 편성하여 운영한 경우
 ㄷ.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3개월 동안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
 ㄹ. 예비군부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문 2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된 甲
 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배임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난 乙
 ㄷ. 「형법」상 공연음란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丙
 ㄹ.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丁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30. 예비군법령상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역인 병은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할 수 없다.
- ② 국방부장관이 500명 정원의 단기 비상근예비군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③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이 비상근예비군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 경우, 입영부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문 31. A시에 거주하는 甲은 지역예비군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다. 甲은 3층에서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甲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甲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직접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ㄴ. 甲이 A시의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A시가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A시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ㄷ. 만약, 甲이 위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서 보상 대상자가 된다.

- | | <u>ㄱ</u> | <u>ㄴ</u> | <u>ㄷ</u> |
|---|----------|----------|----------|
| ① | O | O | X |
| ② | O | X | O |
| ③ | X | O | X |
| ④ | X | X | X |

문 3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비군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오염정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만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3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②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그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그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 34.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집되어 훈련 중인 예비군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 ② 예비군제복 및 베레모를 착용하는 경우, 모표는 모표의 중앙이 베레모 앞면의 중앙과 일치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예비군제복의 흉장은 예비군제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 중앙 봉제선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복 중 지휘관이 입는 점퍼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하여야 한다.

문 35. 예비군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 소개(疏開) 명령을 하였으나,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X 대학교의 총장 乙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학생이 동원된 기간 동안 출석을 하지 못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였다.
- 예비군 훈련을 위해 소집된 丙은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였다.
- 전시(戰時)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丁을 검문하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 ① 甲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소관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차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시에 발생한 ㉠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甲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 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A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甲이 인정하는 재난은 ㉠에 해당한다.
 - ② ㉠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외국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재난인 경우에는 甲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 ③ 甲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 ④ 甲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 및 A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의 발생을 발견하였음에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재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재난인 경우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한다.
-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운영하여야 하는 국가재난관리기준에는 재난 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참여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문 45. 다음 사례에서 ㉠ ~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X광역시의 시장은 X광역시 Y동의 화재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화재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한 후 지체 없이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위의 화재가 발생하자 X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었고,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 X광역시 소방본부장 甲은 즉시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긴급수송 및 구호품의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 甲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제한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 甲은 신속기동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휘요원, 안전담당요원,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 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으로 구성된 권역현장지휘대를 구축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 및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자연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운영하게 하려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재난상황이 끝난 후 실시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긴급구조교육을,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긴급구조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의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하여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②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 통제단장이 한다.
- ④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가 현장지휘소에 파견해야 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이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④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가)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 (나)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다)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1천명
②	5월 25일	국무총리	국무총리	1만명
③	4월 16일	국무총리	국무총리	1만명
④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1천명